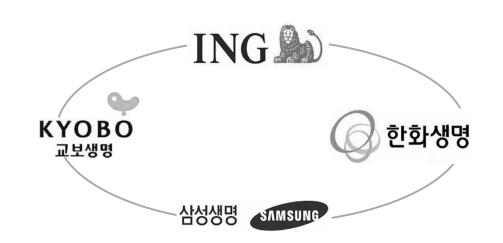
'자살보험금 폭탄' 째깍째깍 생보사들 초긴장



금감원, ING생명 미지급 이달중 제재 "약관 우선"…20곳 최대 1조 지급해야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다른 생명보험사도 모두 자살보험 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그동안 미지급한 보험금만 3000 억 \sim 4000억원, 향후 부담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 대 1조원대에 이르러 생명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생보사 등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ING생명과 똑같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20개 생

자살보험금

생보사들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2년(자살 면책 기간)이 지나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은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아 꼼수를 부린 것 이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가져다 쓴 데 따른 '약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보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약관상 지급 하도록 돼 있어 사회적 파장보다는 고객과의 약속인 약 관 준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생보사들은 또다시 악재를 만났다며 볼맨소리를 내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임직원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처해왔으나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 건으로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구조조정을 단행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 외에도 ING생명역시 부사장과 전무, 상무 등 임원 32명 중 18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에게 운용수익률 보다 높은 평균이율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자율차 역마진이 지속되고 있다.

시중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찾거나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재가 확정된다면 대형사 보다 중소형사에 미칠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신용카드 발급 받는다

연말부터 기준 완화

이르면 연말부터는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 을 수 있게 된다. 또 창업 1년 미만의 자 영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발급 기준 이 완화된다.

지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 카드 발급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신용카드 결제능력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는 경우 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등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다소 엄격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 작업은 전업 주부도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 월 50만원 미달자, 3매 이상 카드 대출 이용자와 같은 다중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전업 주부는 오랜 기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 신용등급이 낮을 뿐만 아니 라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 카드 발급 자 체가 쉽지 않다.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려면 자신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증빙이 있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이 때문에 주부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가 아닌, 배우자가 발급받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부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가계소득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인데도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다고 해서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를 근거로, 그 절반가량을 주부의 소 득으로 인정하고, 다른 기준 요건에 해당 하면 발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자신의 예금이나 자산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고, 국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은행들 환전수수료 첫 고시

中위안화 신한은행 가장 싸고 동남아 통화는 우리은행 최저

외국돈을 바꿀 때 드는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중국 위안화의 경우 신한은행, 동남아시아 지역 통화는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30일 홈페이지에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을 처음 고시 했다. 기존에는 매입·매도환율(매매기준율)만 고시됐지만, 이날 부터 환전수수료까지 고시한 것이다.

가장 거래가 많은 미국 달러화의 환전수수료율은 모든 은행이 1. 75%로 같다. 일본 엔화도 은행별 환전수수료율이 대동소이하다. 중국 위안화는 신한은행이 5%로 가장 낮고, 외환·우리·하나은행은 7% 수준이다.

동남아 지역처럼 국내에 실물 화폐가 흔하지 않아 수송료와 물 량 확보 부담이 큰 국가의 통화는 은행마다 환전수수료율에 큰 차 이가 났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경우 우리은행은 약 2%의 수수료를 붙였다. 반면, 국민은행은 14%의 환전수수료율을 매겨 우리은행의 7배에 달했다.

태국 바트화도 우리은행이 2%인 반면, 농협은행은 6.5%다. 말 레이시아 링깃화는 농협은행이 1.9%로 가장 낮고, 국민·외환·하나은행이 6%다.

환전수수료율이 낮다고 무조건 해당 은행에서 환전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건 아니다.

환전수수료율은 통화별 매매기준율에 포함되는 만큼 실제 각은행이 매매기준율을 얼마로 책정하느냐가 환전의 유·불리를 정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휴가 시즌에 은행마다 벌이는 환전수수료율 할인 이벤트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환전 수수료 따져보자" 은행마나 화폐별로 환전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여행땐 방문할 국가의 사용화폐와 수수료율을 따져봐야 한다. 시중은행은 지난 30 일부터 매입·매도환율(매매기준율)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까지 고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코스피 상반기 내내 답답한 박스권인데··· 증권사는 장밋빛 전망···목표가 괴리율 26%

코스피 지수는 상반기 내내 박스권에 갇혀 답답한 행보를 보였지만, 증권사에 서 내놓는 전망은 여전히 장밋빛에 가깝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이내 국내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165개 상장 사의 목표주가 괴리율(현주가와 목표주가의 차이) 평균은 지난달 30일 기준 26%에 달했다.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은 67.76%의 괴리율을 나타낸 코라오홀딩스였다. 이 회사의 30일 종가는 2만2천950원이었지 만 증권사들은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 된다는 전망과 함께 목표주가를 3만8천 500원으로 제시했다.

그 뒤를 한미약품(63.20%), 에스엠 (56.54%), 이녹스(55.21%), 네패스(53.87%), 키움증권(52.93%), 한국가스공사 (50.36%) 등이 이었다.

목표주가 괴리율이 30% 넘는 곳도 56 개 종목으로 전체의 33%에 해당했다.

최근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실적 우려라는 상반되는 이슈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내린 삼성전자의 괴리율은 31,34%였다.

삼성전자의 지난 30일 종가는 132만2 천원이었으나, 목표주가는 173만6천364 원으로 나타났다. 2분기 실적 부진 등이 예상되며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잇달 아 하향 조정했음에도 괴리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물론 괴리율이 높다는 것 자체를 부정 적으로만 볼 순 없다. 괴리율이 커진다 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 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목표주가가 현재 주가와 지나 치게 벌어질 경우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으며 증권업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될 수 있다.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실적과 목표주 가에 대한 하향 요인이 생겨도 해당 기업 과의 관계 등 때문에 소신껏 발언하지 못 하는 분위기도 괴리율을 키우는 요인이 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증권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주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괴리가 너무 크게 벌어질 경우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